부산광역시의 대기환경관리정책과 PSI

허 옥경*, 이 귀옥[1]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1]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환경정책을 수립.조정하고 환경관리기능, 자연보전기능, 오염방지기술개발 및 지원기능등을 관장한다. 대기, 수질오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미약한 편이고, 환경오염의 규제 및 단속정도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의 수립은 각 지역에 맞는 환경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조례의 제정 등을 통한 독자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기질은 보고된 자료상으로는 환경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나 자동차의 급증과 낮은 도로율로 인한 교통정체유발로 오염이 심화되어 체감오염정도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마음놓고 심호흡을 할 수 있는 대기로의 회복을 위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1차적인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입법을 하여 지방정부가 지역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같은 지역단위의 조직을 출범시켜 지역의 대기질현황 파악, 대기오염저감, 대기질유지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이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하여 지역대기질 개선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대기환경의 감시관리를 전담할 지역기구의 도입이 필요하고, 대기질의 개선과 유지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할 교통부문의 관리는 반드시 대기환경정책과 연계성을 가져야하는데 이는 지역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 이행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치의 설정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통한 대기질의 개선 보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용이한 대기오염 정보전달체계(Pollutant standard index)의 도입을 통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환경질의 개선, 유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의 참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진다. 중요성의 인식은 환경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것이 시민의 건강위해도와 직접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전달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그 실효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된다. 부산시의 경우 대기오염상황을 전광판을 설치하여 알리고는 있으나 그 매체가 ppm과 같은 전문적인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치들과 단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없어 대기질보고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EPA가 오래 전부터 다섯가지 오염물질(SO_2, NO_2, CO, O_3, PM_{10})의 농도를 건강위해도를 고려한 일정구간의 수치로 환산하여 표준화 된 지수를 사용하여 언론매체에 보고하고 있다. 대기질의 상태를 온도나 습도상태를 이해하는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저감유도권고(자동차 수요억제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표준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대중정보전달 매체를 사용하여 대기질상황을 알림으로써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